

가상자산(Cryptocurrency), 그리고 디지털 화폐

가상자산(Cryptocurrency), 그리고 디지털 화폐

3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
4	화폐의 구분
7	테더(USDT)와 리브라(Libra)
9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지역화폐
11	마치며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

알리페이, 리브라, 테더, 메이커 DAO. 하루에도 수십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거나, 그에 걸맞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다.

출근길 커피 한 잔을 위해 지폐를 꺼내는 대신, 신용카드를 긁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값을 지불한다. 물론, 한 번의 결제를 위해 시스템상에서는 수많은 정보 교환과 결제/지불 처리 등이 이뤄진다. 익숙해진 스마트폰 기반의 'XX 페이' 대신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는 광경을 떠올려보자.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디지털 화폐 사업자에게 금융 라이선스를 발급하거나, 혹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발행할 수도 있다.

화폐의 구분

먼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화폐를 구분해보자.

국제통화기금은 2019년 7월 발간된 핀테크 노트(FINTECH Notes)에서 ▲유형 (type) ▲정산 가치(value) ▲지급 보증 ▲기술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화폐를 구분했다.

첫 번째 구분 기준인 유형은 크게 청구권 중심(Claim-based)과 개체 중심(Object-based)로 나뉜다. 청구권 중심 지급은 이용자들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디지털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통해 이용자별 보유 및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반면, 개체 중심 방식에서는 이용자들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음으로 현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이용자별 보유 및 거래내역을 계좌를 통해 관리하지 않는다. 앞서 말했던 출근길 커피 한 잔을 구매하기 위해 냈던 현금은 개체 중심의 지불 방식으로 거래와 동시에 정산이 완료된다. 반면, 현금 대신 직불카드 혹은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인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해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금융기관 간 이체 및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번째 기준인 정산 가치는 청구권이 행사됨에 따라 발생하는 화폐와의 교환비가 고정인지 가변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또한, 지급 보증은 정부 혹은 민간 발행 주체에 의존하는지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 기준인 기술은 정산 과정이 중앙화된 서버 혹은 분산 원장 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혹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분산 처리되는지를 구분한다. 분산 처리에는 노드 운영 및 네트워크 참여가 제한적인 프라이빗 구조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구조가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화폐 혹은 지불 수단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중앙은행 화폐(Central bank money)

중앙은행 화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폐와 동전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거래 당사자 간 정산된다. 현재 논의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현금과 달리 익명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가상자산(Cryptocurrency)

각각의 계산 단위를 지니며, 비은행 기관 혹은 기업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혹은 '민트')한다. 가치 유지 여부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격이 높을 때 발행량을 늘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유통량을 줄이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 가상자산을 관리형 코인 혹은 알고리즘 기반 가치 유지 코인이라고 부른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치 변동성이 높은 경우 퍼블릭 코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은행 보증 화폐(B-money)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청구권 중심 화폐로,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송금이나 직불카드, 수표 등의 형태로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넘어가는 과정이 요구된다. 은행 보증 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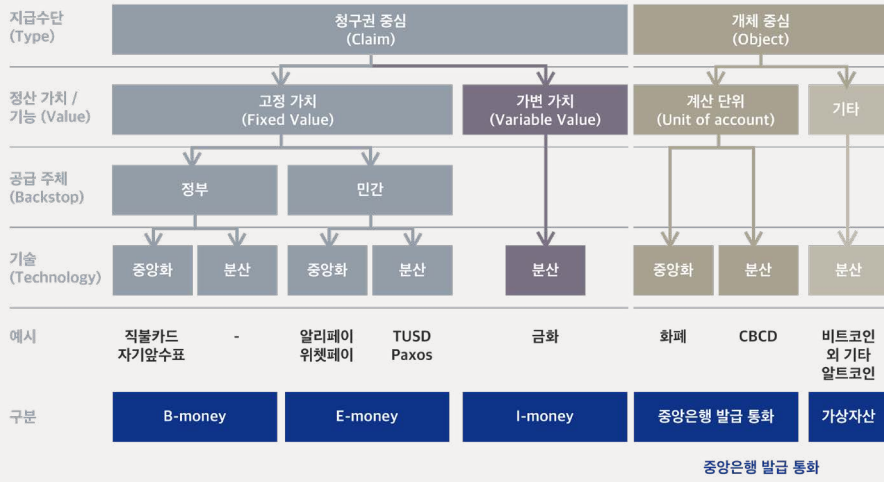
4) 민간 보증 화폐(E-money)

지불 결제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화폐다. 액면가에 대한 지급 보증을 지원한다는 점이 기존 가상 자산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다. 보증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은행 보증 화폐와 유사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민간 보증 화폐로는 제미니, 팍소스, USDC 등이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린다.

5) 단기 투자 화폐(I-money)

아직까지 화폐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새로운 결제 방식이다. 민간 보증 화폐와 유사하지만, 청구권 행사 시 고정 비율 대신 가변 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

화폐의 구분



(출처-IMF, 2019)

테더(USDT)와 리브라(Libra)

액면가에 대한 지급 보증을 내세운 유의미한 시도는 테더(Tether)사에서 시작했다. 테더사는 미국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테더 토큰(USDT)을 발행했다. 특정 은행의 달러 예치금에 해당하는 만큼 테더를 발행해 액면가(1 USDT = 1 USD)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것. 다만, 테더는 지급 보증이라는 측면에서 민간 보증화폐의 가장 큰 단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2017년 4월의 웰스 파고(Wells Fargo) 은행과의 소송과 비트파이넥스의 테더 유보금 유용 등의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예치금만큼의 달러가 실제로 있는지 회계감사를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걸기도 했지만, 테더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이를 회피했다. 테더사와 관련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테더를 둘러싼 각종 스캔들은 단기적인 가상 자산 침체를 시작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장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테더처럼 특정 법정화폐에 대해 고정 비율로 지급을 보장하는 대신, 여러 통화 혹은 실물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도 등장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Libra)다. 리브라는 ▲가치 유지(Stability), ▲낮은 인플레이션(Low inflation), ▲국제 통용(Wide global acceptance), ▲다른 통화나 재화로써의 쉬운 대체(Fungibility)의 특성을 갖는 국제통화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리브라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가치의 실물자산을 확보하고 이를 리브라 리저브라고 부른다. 독일의 한 매체에 따르면, 리브라 리저브는 최대 50%의 미국 달러와 18%의 유로화, 14%의 엔화, 11% 영국 파운드화, 그리고 7%의 싱가포르 달러는 물론, 해당 국가의 단기 채권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전해졌다.

나아가, 지급인과 수취인 혹은 모든 거래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폐쇄적인 생태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불 수단도 있다. 가상자산인 스텔라 루멘(XLM) 기반으로 운영 중인 사토시 페이는 글로벌 콘텐츠 소액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거래 당사자들이 송금을 직접 주고 받는 방식 대신, 마치 기프트 카드나 쿠폰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제 송금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피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간 주도 디지털 화폐가 가지는 한계는 뚜렷하다. 아무리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리저브를 쌓고 안정성을 확보하더라도 지급 보증에 대한 의문은 끊이질 않는다. 또한, 민간 주도 디지털 화폐는 기존 통화 정책이나 외환 및 재정 정책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리브라를 견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이를 말해준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지역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법정화폐로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며, 이용자 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현금과 같이 지급과 동시에 정산이 완료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실물화폐와 함께 화폐 발행액을 구성하며,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화폐단위를 사용해 1:1의 고정 교환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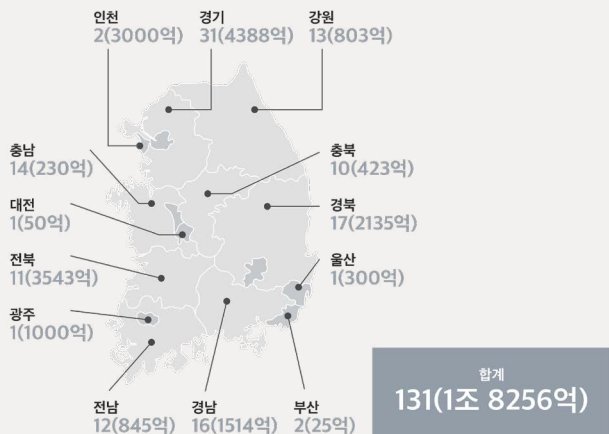
한국은행에 따르면, CBDC의 가장 큰 장점은 현금 거래의 비효율성 축소와 원가 절감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현금 거래로 인한 직접 비용이 GDP의 1~2%에 달하고, 지하 경제 양성화에 따른 재정적자폭의 완화라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실물화폐의 비효율을 제거해 효율적인 세금 징수 및 보조금 지급, 거래 내역의 투명성 확보 등 통화의 발행과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CBDC에 대해 논의하기 전 지역화폐로 잠시 넘어가 보자. 지역화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자체에 따라 액면가의 5~10%에 이르는 할인을 제공하거나, 6%대의 높은 캐시백이나 현금 영수증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 자영업 성장 등의 일환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권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은 2.3조가 발행될 예정이다. 올 7월 기준으로 연간 발행 규모의 53%인 1조 2,279억 원이 판매됐다. 행정안전부는 목표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800억 원을 국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 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발행량 및 혜택 차이를 시작으로, 지자체 안에서의 순환 효과 측정이 불가능한 점과 이로 인한 추적의 불가능(지류 상품권/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단체장의 재량에 전적으로 달려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지역화폐의 단점으로 꼽힌다. 캐시백이나 할인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는 구조 역시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단순 국비를 활용한 발행비 지원을 넘어 정부가 발행, 유통, 사용, 정산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지류 상품권이나 무기명 선불카드 등 제각각인 형태를 전 과정에 걸쳐 추적이 가능한 디지털 화폐의 형태로 통일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적, 법률적 프레임워크 역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합성CBDC(Syntethic CBDC) 모델을 고민해볼 수도 있다. 지역화폐 발행부터 정산까지 중앙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축 및 운영하며, 중앙은행에 일정 비율의 준비금(Reserve)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초기 발행비 지원보다 지역화폐 사용량이나 유통 흐름 등의 평가 기준에 맞춰 이자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향후 CBDC 도입에 앞서(한국은행은 이미 해외에 비해 CBDC 발행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테스트베드처럼 활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전국 170여 개 지자체에 제각각 구축돼있는 각기 다른 지역화폐의 형태를 통일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

2019년도 광역/기초 지자체 발행 및 도입 예정 지역화폐와 발행액 현황
(2019년 3월 기준, 괄호 안은 발행액(단위: 원), 자료: 행정안전부)



(출처-쓰면서도 받으면서도 '좋아요' 일상으로 다가온 '지역화폐', 경향신문, 2019-04-27)

마치며

지난 2019년 10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인 백트(Bakkt)가 디지털 자산 결제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은행을 꿈꾸는 스타벅스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스타벅스는 약 1.8조 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예치금을 비트코인 혹은 디지털 자산을 통해 국경이나 통화애 얽매이지 않고 활용할 수도 있다. 금리가 낮거나 금융 인프라가 발달되지 않은 지역의 고객들이 현지 은행보다 스타벅스 앱에 돈을 예치하고, 스타벅스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 사업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 전문 회사도 아닌)스타벅스나 페이스북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먹거리 발굴에 애쓰는 만큼, 우리도 지역화폐라는 뛰어난 테스트 베드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하지 않을까.



Blockchain Report
BLOCK-SHOT
January, 2020

www.blocko.io
info@blocko.io
82 31 8016 6253